

요약 및 정책건의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행정구역단위 중심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광역경제권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소위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는 권역별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광역경제권으로서 수도권의 역할과 대외적 위상을 살펴보고,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수도권은 여건상 기성시가지의 외연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어 광역적 접근이 요구되는 권역이다. 동시에 고급인력,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자원이 가장 많이 집적된 곳으로 국내의 타 권역보다는 해외 유사 대도시권과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한국의 선도경제권으로서 이 지역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한 단계 도약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광역적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창구의 역할과 기능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므로 우선은 조직, 기능이나 예산확충 문제를 요구하기보다 피부에 와 닿는 광역적 현안문제를 설득력 있게 조정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향후 강화해야 할 역할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 과제로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첫째, 이

미 수립된 수도권 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8개 우선추진사업, 지역선도 산업과 18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현화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부처가 예산을 직접편성하게 되어 있는 광역발전계정은 일부라도 포괄보조금형태로 전환하도록 건의하여 권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SOC사업의 광역적 연계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일이다. 넷째,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몇 개의 광역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 광역생활권 단위의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시도위원 중 호선하는 자로 구성하여 광역적인 목소리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 또한, 단기과제로서 고려해야 할 일은 내부의 역량 가꾸기이다. 첫째, 광역권 단위의 연구조사자료축적은 물론 정기적 리포트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둘째, 현재의 내부 인력만으로는 현안과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다. 셋째, 수도권의 관련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일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광역경제권계획, 국토종합계획상의 권역계획인 수도권계획은 서로 근거법도 다르고 별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상호 정합성 검토 및 조율이 필요하다.
- 내부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다음의 단기과제는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다. 즉, 판 벌리기 작업이다. 첫째, 수도권에서 가장 현안과제인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일이다. 둘째, 수도권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유사 광역행정기관의 체계를 조정하는 일이다. 수도권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별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광역행정기관과의 조율 및 체계조정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통합조정하는 일이다. 셋째, 5+2 광역경제권의

만형으로서 국내의 여타 권역과의 상생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은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광역적 공동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현재 여건상 수도권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필요한 광역적 현안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가는 일이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생활권 단위 선출직 광역의회 구성을 고려해볼 직하다. 현재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수도권을 몇 개의 광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그 광역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광역의원을 선출하여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오레곤주의 Metro를 들 수 있다. 둘째, 보다 진보적인 방안으로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광역도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행정구역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권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예산편성권 및 기획 조정권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도시재생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경제권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관련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시·도가 사업제안을 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정부 부처들의 할거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들 간의 할거주의 이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